

날짜 : 2025. 6. 17.(화) 수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당 : 정책실 (010-3119-5330)	 <p>행복한 교사 교육의 미래 함께하는 <b>인천교사노동조합</b></p>
위원장 김성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6 B동 405호 <a href="https://ictu.kftu.net/">https://ictu.kftu.net/</a> 대표전화 010-8108-5479 E-mail: ictu24@naver.com	

[보도자료] 인천교사노조,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개와 “불법촬영·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 및 탄원서명 전달 공동 기자회견” 개최

## 불법촬영·딥페이크 성범죄, 7천인 “엄정 처벌 촉구” 탄원서명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 인천교사노조,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단체 등 50여 단체와 연대,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엄정 처벌 필요! 7천여 명의 탄원서명 제출
- 최연선 수부 “우리 사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시민사회·여성단체가 함께하겠다”
- 김성경 위원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대단체들과 함께 시민이자 교육자로서 본 사안의 감시자로 행동하겠다.”고 의지 밝혀

지난해 인천 모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 이하 인천교사노조)은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사회 단체들과 17일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한 처벌을 촉구’ 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국회의원을 비롯해 교육·여성·시민단체 등 50여 단체가 연대하여 피해자를 지지하고 재판부의 단호한 판단을 요구했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한 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불법촬영하여 이것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증거를 직접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고, 가해 학생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퇴학 조치 후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연선 수석부위원장은 사건 경과 보고 및 탄원 결과 발표에서 “공동주최로 연대해주시는 교육·시민사회·여성단체 52개, 탄원서 77부, 서명운동 7,044명 제출을 통해 마음을 모아 주셨다”며 “공판을 참관하며 사법 기관 및 우리사회가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전국의 교사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대 탄원서명운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총 7천여 명이 참여한 서명지와 탄원서는 이날 법원에 공식 제출됐다.

피해 교사 발언을 대독한 한현정 교권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사회적 인식이 낮아 회복에 집중하기보다 피해를 직접 증명하고 해명하면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의 교원3단체의 대표인 인천교사노동조합 김성경 위원장,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이대형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최지은 지부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 한국노총 인천본부 김영국 의장, 인천여성회 손보경 회장, 한국여성인권플러스 김성미경 대표,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문은 연대단체 50여 곳을 대신하여 인천의 교원3단체 대표가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이 땅의 교사, 학생,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다” 며,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사건의 중대성을 밝히며 첫째, 피고인의 엄중 처벌, 둘째, 피해자를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셋째,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김성경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회복과 우리 사회의 교육 정의 실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연대단체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교사, 학생 대상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이번 사안의 엄정 처벌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인천교사노조는 연대 단체들과 함께 향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교육청 대응 체계 개선,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2025. 6. 16.

## 인천교사노동조합